

도로 위 사람잡는 공포의 쇠뿔치 ‘판스프링’ 해결 대책없나

최근 화물차 주행중 떨어져 승용차 운전자 중상 화물차 완충장치이나 적재량 늘리려 불법사용 도로 낙하물 건수 매년 ↑ ...5년간 126만여건 달해

이른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로 낙하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에 떨어진 낙하물 건수는 총 126만6480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17건으로 2명이 숨지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원인이 판스프링으로 판명된 사고는 총 5건으로 2015년 1건, 2016

년 1건(부상 2명), 2018년 2건(사망 1명), 2019년 1건으로 집계됐다. 판스프링은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다. 문제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탄성이 강한 판스프링 특성을 활용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불법 설치해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느슨하게 고정된 강철 재질의 판스프링이 빠지면서 뒤따라 오던 차량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월 25일 경기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관광버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바꾸려 튀기면서 반대편에서 운행 중이던 승용차에 부딪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가 난 차량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길이 40cm, 폭 7.5cm, 두께 1cm, 무게 2.5kg의 강철 재질로 제작된 부품이었다. 올해 9월 18일에도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일주IC 부근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타워크레인에서 '마스트핀'(타워크레인 부품)이 떨어지면서 다른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가 중상을 입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화물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등 불법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판스프링은 관련 규정이 모



호해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단속·관리에 제약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일선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튜닝 승인 및 검사 업무처리 요령 ▲판스프링 승인조건 등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또 화물차 적재함에 판스프링 등 불법장치를 설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안내했다. 경찰과 전문가는 최근 화물차 운

기사들의 인식 개선과 화물차 적재함 설치·적재 시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판스프링에 의한 사고가 안 나려면 화물차 기사들이 우선 적법한 고정장치를 설치해 차량을 운행하려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 단속과 계도, 홍보활동을 지속하면 점진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의 인식도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부 김필수 교수는 "판스프링은 하루 서스펜션에 연결된 추가적인 충격 완충 장치인데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것을 잘라 적재 화물을 지탱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판스프링은 약간 휘어진 형태라 잘 빠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가 나는 근본적 원인은 판스프링이 아니라 개방형 적재차량과 화물적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화물차 대부분은 컨테이너와 같이 폐쇄형으로 낙하의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위로 적재를 쌓아 올리는 경우에도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적재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조두순 출소 시 24시간 밀착감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한달여 앞둔 10일 오후 경기 안산시 도시정보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안산 단원서는 이달중 안산시의 협조를 받아 조두순 거주 예정지 최근접 위치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산발적 지역감염 잇따라...방역 긴장

광주교도소발 감염 4명으로 늘어...밀접접촉 동료 50명 '음성'

광주·전남에서 지역 내 전파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1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순천시민 2명이 전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197·198번 환자로 분류돼 순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97·198번 환자 모두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를 방문, 진단 검사를 받았다. 감염 경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직원·방문객 등 확진자가 잇

따른 순천 모 은행 연향동지점과는 연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감염원과의 접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조용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에서는 전남 광주교도소 직원(520번 환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던 지인 2명 외에도 동료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광주교도소 관련 감염 사례는 4명으로 늘었다. 520번 환자의 직장 내 접촉자로 분류된 51명 중 50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통제되고 있다. 시·도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진술을 토대로 역학 조사를 벌여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통해 추가 감염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미희기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기업, 증인출석하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난해 4월 파문을 일으킨 여수국가산단 기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과 관련, 전남도의회가 여수산단의 주요 기업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로 예정된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여수국가산단 주요 기업 책임자에게 증인으로 출

석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들 기업의 책임을 묻고 환경개선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은 GS칼텍스,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

호석유화학으로 총 5개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해당 기업들이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의회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 이후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여수산단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비밀이야” 사찰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60대 스님 실형

법원 징역 6년 선고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존중간) 혐의로 기소된 스

님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and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의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장애인존중간)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

태에 있음을 이용,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남지역 한 음식점에서 만난 B씨를 광주·전남지역 사찰 4곳에 데리고 다니며 23년 동안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등을 시켰고 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